

인터뷰

“부실 위험 내포한 저가 위주의 입낙찰제도 반드시 바꿔야”

-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공공 물량 확대 기대 -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신입회장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은 올해 54세로 ‘젊은 회장’이다. 지난해 6월 대표회원들에 의해 추대되어 제20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동진건설을 21년 전에 창업하여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 강원도 토박이 건설 경영인이다. 아울러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국제라이온스협회 지역 부총재, 원주 지역 장학재단 이사장 등 지역 사회 활동에도 열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는 강원도 건설산업의 발전을 갈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회원사 대부분이 공공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도내 SOC 공사는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인건비와 장비비는 계속 상승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동기 회장은 앞으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 및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으로 향후 공공 물량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업체들이 이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할 방침이다. 회원사간 단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주, 강릉, 춘천 등 권역별 개성이 강한 강원도회 특성을 고려해 협회 임원의 권역별 균형을 이루고, 회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여 회원들이 협회를 믿고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정동기 회장을 만나 강원도 건설산업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6월 지역 건설업계의 수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그동안 강원도 건설산업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 오셨는지요?

어느덧 강원도회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으로 도회장에 취임한 후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의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함을 체감하며 올 한 해에는 더욱 경주해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겨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공사 물량 확보를 위한 수주 지원 활동을 최우선 사업 과제로 삼고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올림픽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화될 대회 관련 시설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올 상반기 잔여 공구 발주가 예정된 원주~강릉 간 철도 공사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구 분할 및 참여 비율 확대에 조금이나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공사 원가 삭감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 교육청 시설 공사 등의 제경비율 적정 반영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지자체가 조달청에 위임 발주한 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삭감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위한 교통망 확충, 경기장 건설 등과 함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등으로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 발주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발주 물량 확대가 지역 건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그동안 강원도는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함께 천혜의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각종 개발 행위와 투자 사업에 많은 규제와 제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도내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이 미비한 곳이 산재해 있으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별다른 성장 동력 없이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으로 향후 투자될 각종 인프라 사업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또한 이러한 물량 확대가 경영난 타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건설산업은 민간부문보다는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규모 면에서도 중소 업체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공사 의존율은 2011년 기준으로 67%로서 전국 평균 4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를 기준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1등급 업체가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도내 업체 대부분이 중소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내 중소 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공공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분할 발주를 통해 지역제한 대상 공사를 확충하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역의무공

인터뷰

동도급 같은 경우는 계약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을 위한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도내 발주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분할 발주하는 등 도내 업체들의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다시 화두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에 있어서도 최저가낙찰제 등 단순 가격 및 실적 경쟁 체계의 확대는 대·중소 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건설산업 존폐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자가 국민인 점을 감안할 때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 공사의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최저가낙찰제와 같은 가격 위주의 계약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기관과 단체, 업계 등을 통해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와 기술제안입찰 방식 확대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 해외 제도 등을 검토하여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 또한 대기업과는 다른 세밀하고 특화된 기술력 개발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선진 건설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달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인 '다함께 잘살 수 있는 나라'와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이 나오기를 고대합니다. 성장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정책을 위해 복지 사업 또한 단순 금전적 지원만이 아닌 건설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복지 시설 확충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자립 기반 확대 등의 종합 복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더욱 많아져 대·중소 간 동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건설산업이 소통과 화합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 건설산업은 1%의 회사들이 9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전환화를 말할 때 하위 30~50% 업체의 구조조정에 열중하고 있는 모순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본금 및 기술자 실태조사라 할 수 있는데, 주로 영세 업체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전환화를 위해서는 페이퍼 컴퍼니 업체를 색출하여 퇴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부터 무분별한 투자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파급을 최소화하고 대·중소 기업이 서로의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 기업 등이 자기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업역을 확보해줄 때 영세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 기업으로, 그리고 중견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CERIK

글 : 이형우 편집장